

la1.28.3

유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에 따른  
민간단체보고서

1995년 7월 3일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la1.28.3



유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에 따른  
민간단체보고서

1995년 7월 3일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 서문

실제에 대한 근거가 없다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이하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정부가 제출한 보고서를 보충하고자 민간단체보고서를 제출한다.

우리는 우선, 한국 정부가 조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받아들임으로써 아동권리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정부보고서는 '진전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조약의 충분한 이행을 위해 취해야만 했던 조치들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정부보고서는 정부가 취한 정책, 법, 프로그램, 서비스를 나열하는데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약의 충분한 이행을 가로막는 '제한'과 '장애요소'를 전달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는 조약이 정한 정부의 보고의무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

민간단체보고서는 이러한 한국정부보고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한국에서 조약이 이행되는 성격을 제시하는 것이다. 우리는 추가정보를 제공하고, 핵심적인 문제를 부각시키고, 권고사항을 제기함으로써 정부가 고무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정부가 가까운 장래에 조약의 충분한 이행을 위한 시도를 하도록 만드는 자극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 보고서는 주로 일반적 논평과 특별논평, 권고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국에서의 조약의 이행에 대한 일반적인 논평으로 시작된다. 첫번째 논평은 조약의 홍보의 부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두번째는 이데올로기적 장애요소를 세번째와 네번째는 구조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 1) 정부보고서에서도 언급했듯이 한국 정부는 조약을 홍보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 2) 정부보고서는 한국사회에서 조약의 이행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요소인,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가부장제적 이데올로기를 변화시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
- 3) 정부보고서는 조약의 이행을 위해 일하는 많은 정부기관을 조정하는데 필요한 중앙정부기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 4) 정부보고서는 조약을 이행하는데 있어 민간단체의 독립적인 역할을 인정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민간단체와 협력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위의 4가지 지적에 덧붙여 민간보고서는 구체적인 논평과 권고를 하고 있다. 이부분은 조약의 실제적인 실현정도를 제시하기 위한 양적·질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법적·행정적 조치와 그것들의 이행간의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고 조약의 이행을 위해 추가로 요구되는 정책과 수단을 상세화했다. 민간보고서는 또한 각 부분마다 '권고'사항을 첨부하고 있다.

민간단체보고서의 체계는 정부보고서와의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 정부보고서의 장과 절을 따르고 있다. 번호가 빠진 장과 절은 민간보고서의 분량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민간보고서에서 서술하지 않은 부분이다. 이러한 체계로 인해 읽으시는 분들의 혼란이 없기를 바란다.



## 제2장 조약 이행을 위한 일반 조치

1. 정부 보고서가 인정 한대로, 한국 정부는 아동 권리 조약을 모든 국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홍보와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국제연합아동기금 한국 위원회>에 넘기고 있으나 그 홍보 성과도 대단히 제한되어 있다.

<권고>  
조약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정부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각 정부 기관, 대중매체는 물론 각급 학교와 사회단체들을 통하여 적극적인 조약의 홍보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 제1절 조약의 규정과 국내법과 정책의 조화 방안

2. 아동을 인식하는 한국 정부와 사회의 기본적인 시각은 조약에 관계없이 거의 바뀌지 않고 있다. 한국의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족 제도하에서 아동은 '가산' 내지는 '부모의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와 같은 한국사회의 친권제도는 조약이 천명한대로 아동을 권리주체로서 인정하고 이를 위한 전면적인 법적, 제도적, 행정적 조치를 수립·이행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권고>  
조약 이행을 위한 국가의 최우선적인 과제로서 아동의 구체적인 권리를 실정법으로 보장하여 전통적인 친권개념을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 제2절 아동 관련 정책의 조정과 협약 이행 사항의 모니터링을 위한 기관

3. 아동의 인권, 복지, 교육을 위한 업무는 각 정부 부처에 분산되어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각 부처의 업무를 조정하고 조약 이행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조약 이행을 위한 실태파악과 업무협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권고>  
위 사업을 위하여 대통령 직속의 아동인권·복지위원회를 중앙기관으로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그 산하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아동 권리를 위한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지원은 관변단체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에 아동의 인권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는 진보적 민간단체에는 정부지원이 거의 전무하다.

<권고>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 제3장 일반원칙

### 제2절 아동이의 최우선의 원칙(조약 제 3조)

5. 정부보고서는 각종 정책과 법이 아동 이익의 최우선을 보장한다고 서술한다. 그러나 실제로 아동은 민법상 그러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민주적으로 가족법제를 개정한 1990. 1. 13. 자 개정민법 제 909조 제 1항의 "미성년자인 자는 부모의 친권에 복종한다"라는 규정은 한국의 아동법제의 현위치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1981. 4. 13.에 제정된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복지 보장을 목적으로 (제 1조), 보호자와 더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할 책임이 있음(제 3조 제 2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아동복지 관련 법령상으로는 소위 수혜자부담의 원칙을 전면내 내세우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최소화하거나 회피함으로써 아동복지법의 규정을 형식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다. 예컨대 영유아보육법 제 21조는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권고>  
조약과 아동복지법의 취지대로 아동의 권리, 교육, 복지를 국가책임으로 인식하고, 이 인식을 바탕으로 관련 법을 정비해야 한다.

### 제3절 아동의 생명, 생존 및 발달권(조약 제 6조)

6. 일상생활에서 아동의 생존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가장 큰 사망원인은 교통사고 등의 '불의의 사고'이다. 한국의 연령별 사망원인(1989년)을 보면 아동의 45%이상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고 있다. 이는 전인구의 11.9%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것에 비교할 때, 약 4배나 되는 비율로서 아동이 격절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992). 아동들이 당하는 불의의 사고에서 교통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데, 이는 질주하는 자동차들로 인하여 아동들의 보행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권고>  
아동 교통 사고율을 대폭 줄이고 도로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 시행해야 한다.

### 제4절 아동 의사존중의 원칙(조약 제 12조)

7. 아동의 의사 존중 원칙은 한국의 전통적 사고와 가장 갈등이 첨예하며, 그 실현을 위하여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야 할 조항이다. 그러나 정부 보고서는 이 조항을 한국 실정에 맞게 수용하기 위한 진지한 접근이 부족하다. 현실을 보면 가정, 학교, 사회에서 아동의 의사가 무시되고 있는 경향이 다분하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과양의 경우 아동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다. 학교에서 학생을 징계할 때 학생에게 소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

<권고>  
정부와 민간단체가 함께 이 조항의 취지를 한국 현실에 적합하게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실현해야 한다.



## 제4장 시민적 권리와 자유

### 제3절 표현의 자유(조약 제 13조)

8. 일상생활에서 특히 학교생활에서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자유로운 사고 형성과 의견교환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한다. 학생들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거나 학교내 비리를 비판하는 경우에 정학, 자퇴강요, 퇴학 따위의 가혹한 징계처분이 가해지고 있다. 이러한 징계 절차는 학교장과 교사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며 당사자인 학생의 의견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또한, 징계처분을 재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 제4절 사상, 양심과 종교의 자유(조약 제 14조)

9. 김영삼 정부 출범이후 상당한 민주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제도와 관행이 남아있고 아동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자면 1994년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청소년 단체 회원에게 국가보안법으로 유죄가 선고되었다.

10.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할 수 없고, 학생의 주거지에 따라 정부가 배정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사립학교들 중 특정 종교재단이 설립, 운영하는 학교들은 특정 종교를 교과과정에 포함시켜 교육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종교를 믿는 학생이 자신의 종교와 다른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배정받게 되면 그 학생의 종교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사례가 있다.

<권고>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학교 배정 과정에서 학생의 종교를 고려하거나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제5절 결사 및 집회의 자유(조약 제 15조)

11. 한국의 학생들에게 결사와 집회의 자유는 거의 보장되지 않고 있다. 학생들의 자치그룹 활동은 학교당국에 의하여 제한된다. 대부분의 학생회는 형식적인 운영에 그칠 수 밖에 없도록 통제 당하고 있다. 학생들이 학생의 날 행사를 비롯하여 사회단체들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반면, 학교 주최 행사나 정부가 요구하는 집회에는 학생들의 의견을 전혀 무시한 채 빈번히 강제로 학생들을 동원하고 있다.

### 제6절 사생활의 보호(조약 제 16조)

12.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불시에 이루어지는 소지품 검사, 속옷 검사, 성적 공개, 우열반 구분 편성 등으로 사생활이 공개적으로 침해되는 일이 빈번하다.

## 제5장 가정환경과 대리보호

### 제1절 부모의 지도와 책임(조약 제5조, 제18조 제2항)

13. 한국은 아동복지의 일차적인 책임을 가족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족과 부모를 적절하게 지원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미비로 가정파괴와 요보호아동 양산과 같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14. 민법상의 친권제도에 관한 제규정은 아동을 부모의 친권에 복종하는 객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아동의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부모의 이혼이나 입양, 파양에서 아동은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요보호 아동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 있다.

<권고>

법과 정부 정책은 가족 기능의 유지와 강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정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입법이 필요하다. 1)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적인 복지 서비스 체계의 운영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 2) 이혼 시 아동양육의무의 이행과 친권행사자의 지정을 법률상 전제조건으로 하고, 이를 사회복지기관등이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3) 입양규정에서 양친자에 대한 제반요건의 강화, 양친자에 의한 파양의 엄격한 제한 등을 명시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

### 제2절 부모로부터의 분리(조약 제 9조)

15. 민법 제 924조에 의한 친권상실 선고제도는 친권이 아동복리를 지키기 위한 의무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을 전제로 신설된 제도이다. 그러나 아동학대나 유기 등과 관련하여 가해부모에 대한 치료와 개입, 피학아동을 위한 치료와 개입 등을 위한 가족지원 및 보완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연계운용 등 조직적인 복지서비스 체계의 미비로 말미암아 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16. 민법 제 837조의 2에서 규정된 면접교섭권과 기타 친권행사자와 양육자 지정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서 의사표시권이 인정되는 연령 기준인 15세는 비현실적이다.

<권고>

현재의 아동의 교육수준과 발달정도, 그리고 기타 제반 경제, 사회, 문화적 변화를 고려하여 의사표시권 인정연령이 15세에서 현격히 낮춰져야 한다.

### 제4절 아동을 위한 양육비 회수(조약 제27조 4항)

17. 아동 양육비의 부모 책임과 관련하여 국내법상으로는 민법 974조의 부양의무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부양의무자인 부모가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되므로 아무런 실효를 거둘 수 없다.

<권고>

아동의 양육과 보호책임을 방지하는 부모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의 대표로서 부모등을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하는 등의 회수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 제5절 가정환경 상실 아동(조약 제 20조)

18. 부모의 이혼이 증가함에 따라 가정환경 상실아동이 증가하고 있다. 92년 5만 7천쌍이 이혼하여 지난 20년간 이혼이 4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혼자사는 가구도 15년간 3.6배나 증가하여 1백만 가구를 넘어섰다. 소년, 소녀가장도 93년도 7천3백22명으로 8년 전보다 50%나 증가하였다(국민일보 95.5.14). 부모 가출로 인한 소년 소녀 가장세대와 편부·편모 가정도 증가하고 있다. 부스리기선교회(1994년)가 조사한 결혼가정 자녀 100명 사례분석에 의하면 7-8세 이전에 부모가 가출하는 경우가 37명에 이르고 있다. 부모가 가출한 경우의 부모세대도 1960년대 이후의 도시 빈민 1세대로서 빈곤 가정에서 방치된 경험이 있는 부모들인 경우가 많다. 결국 가정 환경 상실은 계승되고 있다.

가정환경 상실 아동에는 스스로 가정을 포기하는 아동들도 포함된다. 1993년의 조사(세계일보, 1993.10.23)에 의하면, 중고생 중 63.4%가 가출충동을 느끼고 있다. 가출충동을 느낀 경우 실제로 가출하는 경우는 10명중 1명이며 청소년 가출의 절반이상이 국교 시절에 일어나고 첫 가출 평균 연령도 12.8세로 낮아지고 있다(형사정책 연구소, 1992. 6. 30).

<권고>  
가정결손과 아동의 가출을 예방하기 위한 상담 등의 프로그램 확대, 가정을 다각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구 그리고 가출아동을 위한 쉼터와 그들의 가정복귀를 위한 치유센터가 필요하다.

## 제6절 입양(조약 21조)

19. 한국의 입양제도는 개선되고 있으나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권고>를 입양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권고>  
1) 입양은 합법적인 기관을 통한 양부모의 사정 및 교육후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입양은 단순히 신고하게 되어 있으나 입양기관을 통해 양부모가 입양아동을 진정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가를 사정하고 교육한 후 입양허가를 하도록 바꾸어야 한다. 비합법적으로 아동을 국내가정에 입양시킨 경우의 처벌조항도 아동복지법 제 18조(금지행위) 제 6호, 제 34조(벌칙) 제 4호, 그리고 199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입양특례법개정법률(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임) 간에 처벌 규정의 일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 그 처벌이 규제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강력한 조치로 강화되어야 한다.

2) 입양아동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한국에서 아동의 동의 없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만으로 입양될 수 있는 아동의 나이가 15세 미만이라는 것은 대단히 높은 기준이다. 이 연령 기준은 낮추어져야 하고 아동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경우라도 3세이상의 아동은 최소한 입양되기 전 입양될 가정에서의 적응을 위한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입양에 대한 아동의 의사도 물어야 한다.

3) 입양아동이 자신의 부모를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아동은 가능한 한 자신의 신분과 부모를 알 권리가 있으므로 그 기록이 보존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입양되고 있는 아동의 99%이상이 친자로 신고되고 있다. 현행법은 이러한 행위를 비합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양부모는 법을 어기게 되고 입양아동은 자신의 생부 모를 알 권리를 박탈당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도기적 대안으로 입양아동이 양부모의 호적에 친자로 입적되고, 입양전의 호적은 가정법원이 보관하는 이중호적제를 도입하

여야 한다.

4) 파양과 친자관계부존 재확인소송을 금지하여야 한다.

한국에서는 입양가정에서 입양아동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서 파양선고를 내리면 양부모는 더 이상의 부양책임이 없어진다. 이와같은 제도는 양부모의 입장만 참작되고 아동의 최상의 이익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제도이다. 따라서 아동의 파양은 20세가 되기 전에는 불허하고, 가능한한 가족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입양되고 있는 아동의 99%이상이 친자로 입적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현실속에서 입양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더 시급한 것은 민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친자관계부존 재확인소송을 금지시키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는 양부모가 아동을 더이상 양육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친자관계부존 재확인소송을 통해 부모와 자녀관계를 단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 8절 아동학대와 방임,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조약 제19조와 제 39조)

20. 현재 한국에서는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학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기에 다음과 같은 <권고>를 수용하여 법·행정절차·지원기관의 강화가 필요하다.

<권고>

1) 아동학대와 방임에 관련된 법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현행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와 방임에 관한 법적보호는 매우 미약하다. 현재 한국에서는 아동복지법 제 18조 제 9호가 아동학대를 금지하는 유일한 법적규정이랄 수 있으나,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라고 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동법 제 34조 제 3호는 학대금지해 해당하는 행위를 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되어 있어 가해자에 대한 법적 제재 자체가 매우 미약할 뿐 아니라 이 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된 사례는 한 건도 보고되지 않고 있다. 또한 현재의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에 관한 시행령과 시행세칙이 없어 아무런 구속력이 없기에 별도의 아동학대 예방법이 필요하다.

피학대 아동에 대한 개입을 위한 법적 근거로는 아동복지법 제 18조에 관계 공무원, 아동복지 지도원 또는 아동위원이 동법 "제 18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업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조사나 질문을 할 수 있을 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부모로부터 아동을 분리시키거나 강제로 교육하는 등의 전문적인 개입을 위한 법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공무원이 가정에 들어가 아동을 아동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데리고 나오려 하면 "가택침입죄" 데리고 나오면 "아동유괴죄"를 범하게 된다. 아동의 신체적 학대가 대부분의 경우 직계가족에 의해 이루어지고 아동의 성적학대도 70%이상이 아동의 직계가족, 친척 또는 잘 아는 사람에게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공무원의 개입을 보장하는 법의 마련이 시급하다.

학교체벌에 관해서는 교육법 76조에 "각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할 때 학생에게 징계 또는 처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체벌을 한 교사의 형사적 책임문제와 폭행교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6건의 사례 가운데 학부모가 승소한 경우는 단 1건의 판례(대법 78조 203, 1978년 3월 14일자 판결)뿐이었고, 체육교사가 반공훈련에 불참한 학생을 구타하여 두개골 골절로 학생이 죽은 경우에도 폭행치사죄가 적용되지 않았다.(서울고법 1978년 6월 23일자 판결)

2) 아동학대 신고제도가 필요하다.

신고가 없이는 아동학대의 치료나 예방을 위한 개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고제도가 법적인



로 의무화되거나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운영되고 있는 CDB(Confidential Doctor's Bureau)와 같은 국가위원회에 의한 비밀신고제도가 실시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와 같이 아동학대 전담 정부기관을 설치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3) 학대받은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를 위한 서비스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에서는 아동학대예방협회에 신고가 들어오면 심한 경우에 한하여 아동일시보호시설(서울시 아동상담소, 소년의 집 등 전국적으로 시, 도마다 1개 이상 있음)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협회나 대학병원이 잠정적으로 치료를 해주고 있으나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 따라서 학대받은 아동은 물론 가해자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치료기관 등이 설립되고 아동의 회복 및 사회복귀를 위해 가정위탁 보호사업이 개발, 활성화되어야 한다.

### 제9절 양육 및 보호기관에 대한 감사(조약 25조)

21. 영·유아시설에 편중된 현행 아동 복지시설 체계로는 아동들을 충분히 보호하고 아동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권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 자립지원시설, 정서장애아시설, 가출청소년쉼터, 결혼가정치유센터, 약물치료시설, 피학대아동을 위한 서비스기관 등이 시급하다.

22. 아동복지시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영·유아시설도 가정 대리 서비스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보조금을 '입소자비례지원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어 시설의 대규모화를 조장하고 있다. 93년 현재 영아시설 평균 59명, 육아시설 평균 78명은 88년 일본의 23명, 50명에 비해 두배 규모이다.

<권고>

점차로 대규모시설을 소규모 그룹 홈으로 전환해야 한다.

23.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도·감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10년간 아동복지시설에서는 성폭행, 구타, 강제사역, 협박, 권권포기강요, 보조금 횡령 등 시설아동의 인권이 유린되는 일들이 적잖게 발생했다. 그러나 정부의 지도·감독에 의해 적발되거나 적합한 조치가 취해진 경우는 드물다.

<권고>

시설감독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적정 인원을 확보해야 한다.

## 제6장 기초보전과 복지

### 제2절 장애아동 (조약 제23조)

24. 장애아동의 수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보고서는 장애아동을 전체아동의 0.76%인 10만 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에 정부보고서가 인용하고 있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1990년도 자료는 장애아동의 출현율을 3.72%로, 교육부의 1994년도 자료는 2.44%로 추정하고 있다. 참고로 장애인단체에서는 전체아동 9백17만8천8백11명의 10%인 9십만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권고>

장애아동의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이에 따른 현실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25. 정부보고서가 기술하듯이 대부분의 장애아동은 성인시설에 단순히 수용보호되고 있다. 또한 운영중인 시설의 대부분은 비전문가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지원에 거의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보조금도 책정기준이 낮고, 수용인원수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각 시설에서는 서비스의 질적 제고보다는 수용인원을 늘리는데 급급하고 있다. 각 시설들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미비한 관계로 장애아동들은 시설에서 퇴소하더라도 자립생활과 사회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권고>

장애아동의 보호, 요양시설은 장애아동의 유형과 정도 그리고 연령에 따라 적절하게 분리 운영되어야 하고, 전문가에 의한 치료와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사회복지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26.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육기관이 부족하고 특수교육 수혜율이 저조하다. 대통령자문 21세기 위원회(1994, 931-932)는 특수아동 중 불과 12.6%만이 교육혜택을 받고 있다고 추정한다. 기존의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대한 재정지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많은 특수학교에서는 기본시설, 기자재, 편의시설 등이 부족하여 적절한 교육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통합교육은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실시되고 있어 장애아동들의 사회적응을 충분하게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권고>

특수교육기관을 증설하고 국가가 책임지고 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특수학교의 설립은 특수아동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교육시킬 수 있도록 다양하게 추진되어야 하며, 점차로 통합교육의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27.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그러나 장애인 의무고용율이 2%이나 정부기관의 장애인 고용율은 0.7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의 업체는 0.42%에 불과하다.

Contract  
정부보고서와  
비교하면  
10%만 있다.



### 제3절 보건서비스(조약 24조)

28.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되었지만 본인부담율이 과중하기 때문에 빈곤 가정의 아동은 사실상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초음파검사, 컴퓨터 단층촬영, 자기공명촬영 등의 검사는 값이 비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보험적용에서 제외되어 있다.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의 예방서비스 역시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특진의 نام용으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가 많아서, 종합병원 외래의 본인부담금은 55%이고 입원의 경우는 50%이상이기 때문에 빈곤 가족의 아동은 사실상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한겨레신문 1995. 1. 15).

한국의 경우는 아동종합병원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동환자들은 소아과의 치료를 받거나, 주로 성인 환자를 다루고 있는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하여 아동들이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아동의 신체는 성인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아피부과, 소아내과, 소아외과, 소아정신과 등과 같은 진료과목별로 아동 전문의가 양성되어야 한다.

### 제4절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조약 26조와 18조 3항)

29. 사회보장 예산이 매우 빈약하고, 아동수당제도가 없다. 대통령자문 21세기위원회의 자료(1994)에 따르면, 1989년에 선진국의 사회보장비는 GDP의 10%-20%를 차지하고 있으나 한국의 복지재정은 GDP의 1.4%에 불과하다(IMF, 1991). 또한 세계통화기금(IMF)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의 총예산대비 복지예산규모는 6.38%로 국민소득이 훨씬 낮은 방글라데시(12.3%) 스리랑카(18.6%) 등에도 못미치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

30. 한국의 보육사업은 1991년 '영유아보육법'의 제정과 더불어 4년이란 짧은 기간에 외형적으로 장족의 발전을 했다. 보육사업에 대한 국가의 관심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정부의 예산규모를 보면, 1991년 419억원에서 1994년에는 1,188억원으로 3년동안 2.8배가 늘었다. 그러나 영유아보육사업이 아직까지는 정부의 자유재량주의에 입각하여 실시되어서 공보육보다는 사보육의 성격이 강하다. 정부가 추계하고 있는 우리나라 보육대상 아동수는 103만명인데 비하여 1994년 12월 현재 8,975개 시설에서 21만9천명 만이 보육되고 있어서 전체 보육수요의 22%에 불과하다. 또한 '방과후학교'의 부재로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보육사업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보육시설 확충이나 비용보조 등이 아동의 권리 개념에 입각하지 않고 정부의 행정편의에 의해 진행된다는데 있다. 먼저 양적인 확충을 보면 전국적으로 보육시설이 수도권 등 대도시 중심으로 설치되어 중소도시 및 농촌의 아동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비용부담에 있어서는 수혜자부담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서 한국 보육이 공보육적 성격보다는 사보육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그리고 보육의 질적 수준이 저급한 편이어서 조속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영아보육, 장애아보육, 연장보육 등 다양한 보육욕구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거의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취학아동을 위한 '방과후학교'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몇몇 민간기관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대상 아동의 1%도 방과후학교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 <권고>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민간시설과 취업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보육대상 아동 모두가 양질의 보육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보육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국민학교, 유아원, 유치원, 사회복지관을 활용하여 방과후 학교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 제7장 교육, 여가와 문화적 활동

### 제1절 교육(조약 제 28조)

31. 94년 학급당 학생수는 국민학교 37.7명, 중학교 48.9명, 고등학교 47.4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대도시의 경우는 대부분이 과밀학급이어서 학급당 학생수가 30명 이상인 학급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숫자는 국민학교 약 120만명(전체 국민학교의 30%), 중학교 약 100만명(전체 중학생의 40%), 일반계 고등학교 약 40만명(일반계 고등학교의 33%), 실업계고등학교 약 30만명(실업계 고등학생의 35%등)으로 전체 학생의 34%에 이르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는 학급당 학생수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학교당 학생수가 너무 많은 거대학교도 정상적인 교육을 저해하고 있다.

#### 가. 학교의 종류

##### (1) 국민학교

32. 2부제 수업이 많이 줄긴 했으나 아직도 1학년 1,027학급, 2학년 643학급, 3학년 125학급이 아직도 2부제 수업을 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들의 생활이 불규칙하고 자신들의 교실이 없어 상당히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다.

33.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교육권의 침해가 늘고 있다. 교육부는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95년까지 전국 국민학교와 분교가운데 10%를 통폐합시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는 교육의 평등권에 비추어 볼 때 크게 어긋나는 것이며 농·어촌 인구를 격감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을 하고 있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한예로 경기도 가평군의 <두밀분교>는 통폐합 반대해 지역 주민들이 마을회관에서 아이들을 1년여 이상이나 가르치기도 했다.

34. 국민학교 학교급식은 의무교육과정의 내용으로서 국가가 시설이나 관리비 등을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 94년 11월 현재 38.2%의 국민학교에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제 14대 대통령공약 사항으로 97년까지는 전면 급식을 실시할 것을 밝힌 바 있는데 그 급식시설비를 전적으로 학부모가 책임지는 것으로 법을 개정하여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늘어남은 물론 일부 빈민지역의 학교는 급식을 할 엄두도 못내고 있다.

##### (2) 중 고등학교

35. 중고등학교의 현실은 학생의 자유가 통제되고 다양한 교육적 활동들이 제약을 받아, 마치 상급학교의 진학만을 목표로 하는 스텝하는 병영처럼 되어 버렸다. 이러한 현실에서 학교는 규제 일변도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학칙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비민주적이다. 학생의 지도 과정에서 부당한 체벌과 폭력, 인격 모독행위 등 교사들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학생 징계는 상담과 대화를 통한 지도이기보다는 처벌과 학교로부터의 분리 위주로 되고 있다. 징계와 학습부진등의 이유로 인하여 중도탈락하는 학생들을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한 장치가 없다. 마지막으로 시설환경에서는 학생들의 신체에 맞지 않는 작은 규모의 교실과 책걸상, 비위생적인 화장실, 복지시설의 미비로 학생들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생활권을 침해하고 있다.

##### (3) 유아교육

36. 유치원은 기간 학제에 포함되지 않아 행·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여 농·어촌 지역과 저소득



특층의 유아들이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유아교육을 담당하지 못하고 전체 유치원생의 78%가 사립유치원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유치원의 공교육화가 매우 시급하다.

#### (4) 직업교육

37. 직업교육은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입시경쟁에서 탈락된 아이들의 집합소처럼 되어 버렸다. 실험실습교육은 현 정보사회에 적용하기에 이미 낡은 교육내용과 시설이 대부분이다. 농고의 경우 학생들의 노동으로 생산된 생산물을 매수한후 그 수익금을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실적에 따라 학교예산에 배정시키고 있다. 결국 학생들의 실습은 단순 사역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다. 현장 실습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이 산업현장에 투입하고 있으나 (산업기술교육진흥법 시행령에 의하여 공고는 12개월, 상고는 6개월) 교육은 명목뿐이고 실습생들을 장기간 저임금노동에 시달리게 하고 있다.

#### 나. 교육예산

38. 한국의 국민총생산 대 교육예산은 3.6%이다. 이는 이디오피아 4.8%, 프랑스 5.5%, 서독 4.1%, 일본 4.7%에 비해 낮은 수치이다. 1994년의 교육예산의 증가율도 일반예산의 증가율 13.7%에 못미치는 12.7%만이 증가되었다. 이렇게 낮은 교육예산은 결국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를 가중시켜 1년 사교육비가 무려 17조원으로 가계지출의 30%나 되어 빈부에 따른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1994).

### 제2절 교육의 목표

39. 한국에서 입시만을 위한 주입식 교육은 아동과 청소년들의 개성과 창조성을 말살시키고 있다.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학교를 중도 탈락하여 비행청소년이 되거나 성적비판으로 자살하는 학생들까지 생겨나고 있다. 1995. 5. 31 발표된 교육개혁안대로 하루빨리 교육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학교교육의 전환이 필요하다.

#### <권고>

- 1) 한국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의 대부분은 불합리한 입시제도에서 비롯된다. 1995. 5. 31에 정부가 제시한 교육개혁안 대로 입시제도를 외형적으로 바꿀 뿐 아니라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교육혁신을 실현하려는 정부의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
- 2) 교육재정을 확대해야 한다. 우선 대통령의 공약대로 교육재정의 GNP 5%선을 확보해야 한다.
- 3) 교사들의 근무여건이 향상되어야 한다. 교사들이 과다한 수업일수와 잡무에서 해방되어야 학생들을 위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다.
- 4) 학생들의 인권과 교육권을 인정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가운데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학생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 5) 징계를 받은 학생을 위하여 각 학교 별로 혹은 지역 별로 지도, 상담, 활동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처벌을 위한 징계가 아니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 6) 학생들이 권리의 주체로서 스스로를 인식하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타당한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습관을 갖도록 하는 인권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제3절 여가, 오락활동 및 문화적 활동(조약 17, 31조)

40. 입시 위주의 교육제도 때문에 아동들의 여가, 오락활동과 문화활동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 학원이나 과외 출석에 아동들의 방과후 시간의 대부분이 소요되고 있다. 서울지역 국민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95년 한겨레신문 여론조사에 따르면 과외나 학원에 다니는 아동들이 79.6%였다. 부모님이 허락한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는 놀고 싶다는 응답이 41.7%로 나타났다. 또 지금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라는 질문에는 시험성적이란 대답이 53.4%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조사는 하기 싫은 공부와 성적에 대한 억압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아동들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억압은 중, 고등학생에게는 정서불안과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 중, 고생 44%가 시험불안증과 정신혼란의 증상을 경험했다고 한다(청소년대화의 광장 조사, 1993. 11.).

#### <권고>

정부는 교육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아동들이 여가, 오락활동과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41. 아동들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나이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 특히 도시 저소득층과 농촌, 어촌 지역의 아동들은 문화활동과 놀이의 기회를 박탈당한 채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다. 도시저소득층 아동의 방과후 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지역공부방연합회의 조사에 의하면 공부방에 나오는 940명의 아동중 음악, 미술 교육을 개인적으로 받는 아동은 한명도 없으며, 부모와 또는 친구들과 함께 음악회, 연주회, 연극, 오페라, 인형극 등 각종 공연 예술을 관람한 경험이 거의 없다. 14세 이상 아동들은 주로 노래방, 커피전문점, 카페, 락카페, 소주방, 비디오방, 만화방, 당구장에 출입하고 있다. (서울 Y.W.C.A.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단, 1999. 8. 27.).

#### <권고>

정부보고서가 인정하고 있듯이 아동의 문화를 위한 투자는 미미하다. 아동들의 여가, 오락활동과 문화활동을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들의 지역별, 계층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종 문화행사를 시행할 수 있는 시설과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감한 재정 투자를 해야한다.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42. 아동들이 독서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다. 1990년에 출판된 아동도서는 1억권이었는데 그중 48%가 참고도서와 만화이다(김선심, 함정인, 한국아동의 현황과 2000년대를 향한 전망 15쪽). 학교 도서관 설치와 보유도서현황을 보면 초, 중, 고교 총수의 47%(4,893개교)에만 도서관이 있으며, 보유도서는 학생 1명당 3권에 불과하고, 도서관당 학생수는 1,881명으로 열악한 상황이다. 도서관 관련 예산은 교육 총예산(92년도 8조 2000억원)의 0.066%에 불과하다.

43.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텔레비전, 불법 만화, 비디오, 비디오게임,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해악이 심각하다. 서울시내 중, 고교생 대상으로 나타난 음란물 접촉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 학생 중 53%가 컴퓨터를 통하여 그리고 63.6%가 비디오를 통하여 음란물을 경험하였다(김준호, 1994, 10.).

#### <권고>

유해한 영상매체로부터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심의와 규제기구가 필요하다. 이 기구는 모든 영상물의 심의와 규제를 일원화하여 담당하는데, 영상물 심의와 등급의 강화, 유해 영상물의



유통, 제조업자 규제 등의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또 음란물 우편검열제 도입과 유해도서목록제 도 등도 검토,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학교는 아동들이 건전하게 영상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매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제8장 특별보호조치

### 제1절 법적 분쟁상의 아동(조약 제 37조, 39조, 40조)

44. 아동의 범죄행위 처리의 핵심은 정부보고서가 기술하고 있는대로 "처벌보다는 교육", 그리고 "소년의 비행은 일반범죄와는 다르게 처리하는 절차"의 시행이다. 바로 이 두 가지 사항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못하다.

45. 소년사건이 수사단계에서 구속위주로 진행되고 구속기간의 장기화로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1993년 1년간 전국소년비행사건으로 처리된 총 119,286명중 구속되어 일반형사재판에 회부된 인원은 21,850명이고, 기소된 총인원은 48,078명이다. 이에 비하여 소년부송치 결정은 12,365건에 불과하다(대검찰청, 1993, 555-556).

46. 일반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소년은 장기간의 일반교도소나 구치소 수감생활로 인하여 악영향에 노출되어 있다. 1993년도 소년 형사공판사건 인원은 총 23,256명인데 이중 부정기형 이상의 실형 선고는 4,119명이고, 집행유예판결은 5,734명, 소년부송치결정은 11,037명이다(법원행정처, 1994, 479, 956). 이중 구속사건의 1심평균 처리기간은 합의부사건은 2.9개월, 단독사건은 2.3개월이 소요된다. 제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나 소년부송치결정을 받는 경우는 각각 806명과 1,543명으로서 그 심리기간은 평균 2.7개월이 소요된다(법원행정처, 1994, 482). 따라서 구속기소된 소년의 경우에는 기소일로부터 제 1회 공판기일까지의 약 30일간의 재판 대기기간을 포함하여 1심 판결을 선고받기까지 최장 6개월, 통상적으로는 2개월에서 3개월 가량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한다. 1심에서 석방되지 않고, 가정법원 송치나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계속적인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 이와같은 장기간의 소년에 대한 교도행정상의 방치로 말미암아 교화보다는 일반성인 형사범들에게 악영향을 받을 위험성이 크다. 특히 형벌위주로 소년사건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일반형사범과의 분리문제는 매우 절실한 형편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소년 형사사건의 심리 분리를 규정한 소년법 제 57조의 규정은 실무상 무시되고 있다. 법원은 소년형사사건의 처리를 분리하여 진행하지 않고 일반형사사건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고 있어서 위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다.

#### <권고>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의 도입을 <권고>한다.

1) 법원이 검찰대신에 일괄 송치받아 일반형사사건으로 검찰로 송치할 것인지 아니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법원선(先議)제를 신설함으로써 불필요한 일반형사범과의 관계를 차단한다.

2) 소년의 구금장소를 '소년구치소'나 기존의 소년원 등으로 하여 차별화한다.

3)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심리불공개 규정 소년형사사건에서도 그대로 준용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4) 심리기일, 재판기일과 심리의 단기집중화를 통하여 재판의 신속한 운영을 보장한다.

5) 소년사건의 경우 형사사건으로의 기소율을 최대한 억제하고 소년보호사건 처리율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6) 소년형사사건 또는 보호사건의 경우 성인형사범에 비하여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므로 수사단계 또는 조사단계에서 변호인 또는 보조인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국선변호인제는 소년형사사건에서도 기소후에만 선임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여 소년보호사건에도 확대적용해야 한다.

### 제2절 착취 상황하의 아동

#### 가. 경제적 착취(조약 제 32조)

47.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아동 노동의 착취를 금하고 있다. 그러나 그 법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최소한 5인이상)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아동과 청소년이 많이 취업하고 있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와 시간제 임시노동의 경우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 <권고>

아동의 경우에 한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아동의 경제적 착취를 방지해야 한다.

#### 나. 마약(조약 제 33조)

48. 한국의 경우 청소년의 마약사용은 아직 심각한 정도가 아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약물 오남용, 환각효과가 있는 부탄가스와 본드 등의 유해화학물질의 흡입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나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

#### <권고>

각종 약물들을 청소년들이 쉽게 오남용할 수 있는 것은 한국에서는 의사의 처방이 없이도 누구나 습관성 의약품을 약국에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처방없이 그러한 약물을 살 수 없도록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 약물과 화학물질을 오남용하는 아동과 청소년을 치료하고 재활을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 공공시설이 확대되어야 한다.

#### 다. 성적 착취와 학대(조약 제 19, 34, 36, 39조)

49. 1990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성폭행 실태에 관한 조사에 의하면 2,262명의 응답여성 중 146명(6.5%)의 여성이 아동성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아동 성폭행 사례는 상담건수의 29.4%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가 75.2%인데, 주변사람이 60.6%, 친인척이 39.4%를 차지하고 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25.6%이다. 그러나 정부보고서는 아동 성폭력의 실태를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또 성폭력특별법 실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50. 성폭행의 경우 피해자인 아동은 스스로 고소할 수 없으며 법정대리인만이 할 수 있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다. 가해자가 법정대리인일 경우(아버지 또는 시설내 아동의 경우는 시설장) 피해자의 친족 또는 이를 인지한 제3자가 고소할 수 있다. 그러나 가해자가 친족인 경우 특히 아버지 등 직계존속인 경우 어머니가 대리고소해야 하는데 가정의 파괴를 원치않거나 경제적으로 독립할 능력이 없는 어머니의 고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법규정 때문에 성폭행에 대한 법적 조치가 제한되고 있다. 또한 수많은 의사들이 성폭행피해아동을 진단, 치료하고 있음에도 법적절차

성폭행피해아동 = 인식이 중요



의 번거로움에 연루되는 것을 꺼려서 신단서 발급을 회피하므로써 성폭력의 법적 조치를 어렵게 하고 있다.

<권고>

성적학대임이 분명하거나 의심이 가는 사례를 접한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수사나 재판 과정에 협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보완되어야 한다. 성학대와 성폭력을 예방, 발견, 대처하기 위한 민간기관과 공적 기관의 조직과 설립이 필요하다.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성교육 프로그램, 성폭력예방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며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키고 예방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51. 정부보고서는 성폭행의 피의자가 된 경우의 조치만 언급하고 있고 성폭행 피해자인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조치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권고>

아동 피해자, 아동피해자 부모 집단상담, 아동피해 후유증을 가진 사람들의 상담과 재활 프로그램을 정부차원에서 지원, 운영해야 한다.

52. 성적학대와 성폭력의 경우 결정적 증거는 아동에게 있으나, 아동의 진술이 법적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 형사소송법 제159조는 16세 미만자는 선서 무능력자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법정 모든 절차를 견딜만큼 강하다면 증언할 수는 있지만 그 증언을 채택하는지의 여부는 법정의 권한이라고 규정한다. 아동의 진술이 불명확하고, 반복되는 질문에 번복하는 경우 증거로 충분치 않다고 기각하는 사례가 많다.

<권고>

아동이 적절한 배려와 보호 속에서 자신의 피해사실을 설명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도록 대리인이나 보호자의 입회하에 진술할 수 있어야 한다. 진술방식도 다양한 배려가 요청된다. 즉 녹음이나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가해자와의 대질신문이 피해시의 공포와 불안을 되살아나게 할 수 있으므로 가해자와 분리하여 진술하게 한다든가 비공개로 진술하게 하는 방식이 그 예가 되겠다.

53. 미성년자의 유흥업소 취업, 유흥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현실적으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강력한 법적대처가 필요하다.

## 참고자료

- Y.W.C.A. 오락실 실태 및 심의제도에 대한 제언, 1994.
- Y.W.C.A. 청소년유해규제법제화를 위한 공청회: 김준호, 1994, 10
- 김선심, 함정인, 「한국어린이의 현황과 2000년대를 향한 전망」
- 김원웅, 「교육백서」
- 김주수, 「친족·상속법」, 육법사, 1991
- 노혜련 외, 「아동권리국제협약 및 1990년대 어린이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세계정상행동계획의 국내이행상황과 당면과제」, 한국사회정보연구원
- 대검찰청, 「93년 검찰연감」, 1993
- 대통령자문21세기위원회 편, 「21세기의 한국」, 서울: 서울프레스, 1994
- 문화체육부, 「청소년백서」, 1993
- 박보희, 김선심 편, 「제 1회 아동생존권 보호 발달을 위한 전국대회 보고서」, 1992
- 방송개발원 시청자의식조사, 1994
- 법무부, 「94년도 법무연감」, 1994
- 법원행정처, 「94년 사법연감」, 1994
- 보건사회부, 「보육사업확충 내실화방안」, 1994
- 서울 Y.W.C.A.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의 보고서 5, 1994, 8, 24
- 서울시가정복지국, 「보육시설운영개선계획」, 1995
- 서울지방변호사회, 1991. 11.7., <새 친족, 상속법 무엇이 문제인가>.
- 서울지방변호사회, 「새친족·상속법 무엇이 문제인가」, 1991
- 유니세프, 「한국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참고자료집」, 1992
- 유진식, 「소년법」, 육법사, 1982
- 이용교, 「한국청소년복지의 현실과 대안」, 서울: 은평천사원출판부, 1994
- 이용교 역, 「아동학대연구」, 서울: 다울, 1993
- 조선대 김학력 교수팀 조사, 1993, 7.
- 차경구 외, 「청소년 약물남용의 사회·경제적 영향 연구」, 서울: 문화체육부, 1994
- 차경수 외, 「청소년 약물남용의 실태와 예방대책」, 서울: 한국청소년학회, 1993
- 청소년 대화의 광장 조사, 1993, 11.
- 최현 외, 「요보호청소년 지원방안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연구원, 1990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권리의 증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행정적 조치」, 1994
- 한국성폭력, 「한국성폭력상담소 개소 2주년 기념자료집」, 1993



이 보고서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본 보고서의 뒷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95년 7월 3일

본 보고서는 유네스코가 채택한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촉진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본 보고서는 유네스코가 채택한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촉진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본 보고서는 유네스코가 채택한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촉진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본 보고서는 유네스코가 채택한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촉진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본 보고서는 유네스코가 채택한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촉진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본 보고서는 유네스코가 채택한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촉진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본 보고서는 유네스코가 채택한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촉진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본 보고서는 유네스코가 채택한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촉진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본 보고서는 유네스코가 채택한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촉진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본 보고서는 유네스코가 채택한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촉진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본 보고서는 유네스코가 채택한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촉진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 SUPPLEMENTARY REPORT to the Republic of Korea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dditional information, highlighting crucial issues, and providing a framework for future action. This report follows each chapter and sec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Report to make the comparison easier. Omitting the chapters and sections which are not mentioned in the Republic of Korea Report.

1. The report does not recognize the CRC as a treaty as an instrument of international law. The report does not refer to the CRC as a treaty or as an instrument of international law. The report does not refer to the CRC as a treaty or as an instrument of international law.

July 3 1995

Submitted by  
KOREA NGOS COALITION FOR THE RIGHTS OF THE CHILD

This report follows each chapter and sec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Report to make the comparison easier. Omitting the chapters and sections which are not mentioned in the Republic of Korea Report.



# KOREA NGOS COALITION FOR THE RIGHTS OF THE CHILD

ACRP Peace Education Center in Seoul  
Center for Cooperative Daycare  
Children's Library Study  
Child Educare Action Campaign  
Daycare Center Association in the Community  
Democratic Legal Studies(DLSA)  
Educational Group of Alternative Culture  
Human Rights Committe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Korean Teachers & Educational Workers' Union(K.T.U)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Korea Women's Associations United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Minbyun  
Leftovers Mission  
National Parents Association for Education  
Parents Action for Humanist Education  
Research & Institute of the Differently Abled Rights in Korea(RIDARIK)  
'SARANGBANG' Center for Human Rights  
Seoul Association of Learning.Center  
The Korea National committee of OMEP  
The National Association of the Volunteer Groups  
Yullin Gul Nanum Salm Teo

## ABSTRACT/INTRODUCTION

We, Korea NGOs Coalition for the CRC, is submitting this 20 page supplementary report to the ROK government report. As the Korean government has committed itself to undertake necessary measur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RC, there has been much progress in the rights of children. But the government report neither adequately explain what has been done nor suggest what should have been done for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CRC. Since it tends to concentrate on describing the policies, laws, programs, and service, it also falls short of addressing limitations and obstacles to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CRC. It thus does not accomplish what it is supposed to do.

The purpose of this report is to present the quality of implementation of the CRC within the Korean context. It is hoped to encourage government by presenting additional information, highlighting crucial issues, and providing recommendations. It is also hoped that this report in so doing signify the government's attempt to fully implement the CRC in the near future.

This report mainly consists of general comments, specific comments and recommendations. It starts with four general comments up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RC in Korea. The first comment focuses upon the lack of the publicity, the second upon the ideological stumbling block the third and the fourth upon the structural problem.

- 1) The government, as its report had stated, still does not make a sufficient attempt to disseminate the CRC
- 2) The report does not set the plan to change the patriarchal ideology which defines child as a property of the parents in a way to seriously hinder the Korean society from implementing the CRC
- 3) The report does not recognize that a central government body is necessary to coordinate many government agencies working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RC; and
- 4) The report does not acknowledge NGOs' independent role to play in implementing the CRC nor provide the way to collaborate with the NGOs.

The report then makes specific comments and recommendations. This part provides th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information to present the actual realization of the CRC. It also indicates the gap between enactment of the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measures and enforcement of them it also specifies the additional policies and measure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RC. The report also suggests recommendations.

This report follows each chapter and section of the government report to make the comparison easier. Omitting the chapters and sections which are not necessary, it starts with chapter 2. We hope this format does not cause any confusion to you.



## CHAPTER 2 GENERAL MEASURES OF IMPLEMENTATION

### Issue 1

As it promised in its report to the U.N., the Korean government is not taking sufficient measures to publicize the Convention on Children's Rights to the Korean people. The government has instead abdicated its duty to publicize the Convention to the UNICEF Committee on Korea. The results of such publicity efforts are very limited.

### Recommendation 1

The government should recognize its responsibility to publicize the Convention and immediately begin to actively publicize not only through government institutions and mass media, but also through educational and social groups.

## Section 1. Measures to Integrate National Law and Policy with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 Issue 2

In disregard for the Convention, the government and society of Korea has not significantly changed its approach to children's issues. Under Korea's traditional patriarchal system, children have been and continue to be treated as "family property" or "that which belong to the parents." Such parental authority as promulgated by Korean society makes difficult any recognition of children as holders of rights, let alone establishment of legal, structural and administrative measures to realize such rights.

### Recommendation 2

In order to fulfill the Convention, the government must give priority to and secure children's rights on an actual legal basis and thereby transform and improve traditional conceptualizations of parental authority.

## Section 2. Mechanisms for Coordinating and Monitoring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 Issue 3

Currently, government management of children's rights, welfare, and education are dispersed among various government agencies. However, the lack of a controlling body to consistently monitor the government's handling of these affairs greatly hinders determining the true status of the government's non-compliance with the Convention

### Recommendation 3

The government should unify the above affairs under a central managing body under the direct control of the President of Korea such as the Committee for the Rights and Welfare of Children and should establish sub-committees under local autonomous organizations.

### Issue 4

Currently, government support for non-government organizations(NGO) on children's issues is limited to those which are cooperative with government. In addition, there has been almost no such support for progressive NGO's that are devoted to monitoring and improving children's rights.

### Recommendation 4

It is essential that the government expand its support of NGOs working for children's rights.

## CHAPTER 3 GENERAL PRINCIPLES

## Section 2.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 Issue 5

The government report states that every policy and law in Korea is geared toward securing first priority for the interests of children. In reality, however, the civil law does not recognize such rights for children. While the government claims that in January 1990 it revised the Family Law according to democratic principles, Article 909-1 of the Family Law reveals the true status of Children in Korea: "Minors shall submit to their parents' authority." The Child Welfare Act, passed on April 13, 1981, states that its objective is "to secure the welfare of children"(Article 1) and designates the responsibility of raising children in a healthy environment to not only parents but also the nation and local autonomous organizations. (Article 3-2) The government has attempted to avoid such responsibility under the theory of "those who receive should pay." For example, the Law on Child Care states that "expenses needed to raise a child are, in principle, the parents' burden."

### Recommendation 5

The government needs to recognize the national level of responsibility in promoting child Welfare as mandated in the Convention and the Child Welfare Act, and it should revise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ccordingly.

## Section 3. The Right to Life, survival and Development (Article 6)

### Issue 6

Children's safety are seriously threatened in Korean daily life. The number one cause of death among children is death by "unexpected accident" such as traffic accidents. According to statistics published in 1989 on the causes of death in Korean over 45% of child deaths are caused by "unexpected accidents." By comparing that death rate, which is approximately four times higher than the national average of 11.9%, a 1992 figure, it is clear that children are not sufficiently protected in Korea. The high rate of child death from traffic accidents shows that Korean children's right to safe walk in safety is greatly threatened by automobile traffic.



### Recommendation 6

There need to be measures to protect children in school areas from traffic accidents. Children should have the right to approach Korea's streets in safety.

### Section 4. Respect for the Opinions of Children (Article 12)

#### Issue 7

Korean traditional thinking clashes with the concept of respecting a child's opinion, therefore massive effort is needed to improve this situation. The government report avoids any practical realization of this concept. In reality, a child's opinion is ignored within society, the schools and even the family. For example, in the dissolution of adoption there is no legal apparatus at all to hear a child's opinion regarding the matter. In school students are given no chance to plead their case prior to punishment.

### Recommendation 7

The government, working with NGOs, should research and set up plans to enforce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in Korean society.

## CHAPTER 4 CIVIL RIGHTS AND FREEDOMS

### Section 3. Freedom of expression (Article 13)

#### Issue 8

The Korean education system, especially the system of cramming, makes the national development and free exchange of ideas for students virtually impossible. In Korea, those students who have special interest in social issues or participate in protest activities against the school are likely to be suspended or expelled from school. Decision-making around such punishment is generally made unilaterally by the principal and teachers, while students are given no opportunity to speak for themselves. There is no system of appeal in the disciplinary system either.

### Section 4.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Article 14)

#### Issue 9

Although there has been considerable reform under the Kim Young Sam administration, there still remain legal restrictions on freedom of thought and conscience in Korea that affect its young people. For example, recently in 1994 members of a youth organization studying social issues were sentenced as guilty under the National Security law.

#### Issue 10

For students or their parents, there is no school choice at the elementary, junior high

and high school levels; rather, the government assigns school placement according to residence districts. Included in that government assignment scheme are private schools established by religious foundations, so that if a child is assigned to a private religious school, he/she may not be able to freely practice his/her religion of choice.

### Section 5. Freedom of Association and Peaceful Assembly (Article 15)

#### Issue 11

There is virtually no freedom of association and assembly for student in Korea. Student activities are all subject to approval by school authorities. Students are strictly forbidden from joining out-of-school activities, especially those sponsored by social issues organizations, while schools forcibly direct students to join government-sponsored activities, regardless of the students' wishes.

### Section 6. Protection of Privacy (Article 16)

#### Issue 12

Students endure personal insult by teachers and school authorities daily. Teachers inspect students' personal belongings and even their underclothing with no notice or warrant. Open publication of test scores and no class allocation according to test scores also deprive students of privacy.

## CHAPTER 5 FAMILY ENVIRONMENT AND ALTERNATIVE CARE

### Section 1. Parental Guidance and Responsibilities (Article 5 & 18)

#### Issue 13

Although Korea declares that the primary responsibility for child welfare shall be on parents, it has never provided a sufficient level of social welfare programs to help parents and family give proper care to children. Consequently, Korean government ignores the increasing need for child protection against the destruction of the family.

#### Issue 14

Provisions regarding parental authority in Civil Code define a child as a mere object which shall be obedient to parental authority. In other words, there are not legal provisions designed to protect children. For example, in the cases of divorce, adoption or dissolution of adoption, there is no legal protection for children. Some of those children face the danger of becoming children with no parental protection.

### Recommendation 8

The government can do much to remedy the situation by equipping its policies and laws to sufficiently reflect the objectives of maintaining and strengthening the family. The following legislation is needed; 1) to legally implement a structured welfare service



system to support the family structure; 2) in the case of divorce, to legally ensure that children of divorce will be guaranteed care by at least one of the parents as a legal precondition to divorce, and to assign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with the surveillance of those issues; and 3) to make more strict the legal requirements for adoptive parents and for the dissolution of adoption.

## Section 2. Separation from parents (Article 9)

### Issue 15

Article 924 of the Civil Code declared the loss of parental rights when the duty to protect a child's welfare has not been fulfilled. The effectiveness of the provision is doubtful, however, because there is no welfare service system to give medical treatment and social intervention for both abusive parents and abused children.

### Issue 16

Article 837-2 of the Civil Code defines the right to a hearing. According to the courts' rulings on appointing parental rights and foster parents, a child has the right to such a hearing and the right to declare his preferences only if he/she is over 15 years of age, an unrealistically high age limit.

### Recommendation 9

The age limit should be lowered considerably, given the education and maturity level of children today, as well as the changing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

## Section 4. State Recovery of Child Care Expenses(Article 27-4)

### Issue 17

Article 974 of the Civil Code provides that parents have the duty of providing expenses for child. In reality, however, the provision is ineffective; the child has no recourse when neglected since his legal representatives are the neglecting parents themselves.

### Recommendation 10

The law should provide that government or local autonomous organizations representing the public can claim child-care expenses from those parents who neglect their parental responsibility.

## Section 5. Children Deprived of a Family Environment(Article 20)

### Issue 18

The number of children who grow up without a traditional family environment has increased as the divorce rate has increased. In 1992, there were some 57,000 divorces. Over the last twenty years, the divorce rate has almost quadrupled. The number of single-parent households has also increased approximately 3.6 times over the last fifteen years, and currently there are more than 1 million single-parent households. A 1993 statistics shows that there were some 7,322 children taking care of their

families by themselves, a 50% increase since eight years ago (Kukmin Daily News, May 14, 1995). Such increase is the result of an increase in runaway parents and single-parent families.

According to a 1994 survey by one church group one church group working for the disadvantaged children, of 100 broken families, thirty-seven children responded that their parents had run away when they were seven or eight years old or younger. Among the parents of these abandoned children, most were considered the first generation of the 1960s urban poor who themselves were deprived of education under poor family conditions. The loss of the nuclear family is thus being pass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The loss of the nuclear family includes those children who run away from their families. According to 1993 statistics (Sekye Daily News, October 23, 1993), 63.4% of junior high school students felt the impulse to run away from their families. Among them, one in ten have actually tried running away. And more than half of teenage runaways first tried to run away from home when they were in elementary school. The average age of a first runaway experience is 12.8 years (Institute for Criminal Policy, June 30, 1992).

### Recommendation 11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organizations providing various family support programs in order to prevent broken families. It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recovery centers for runaways to help them go back to their own families.

## Section 6. Adoption (Article 21)

### Issue 19

There have been many problems in the Korean adoption system.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should be reflected in the policy-making process on child adoption.

### Recommendation 19

1. Adoption should be approved only after the adopting parent are investigated and educated by a legal institution.

Currently, adoption can be achieved simply by filing a report. The process should be changed so that an adoption institute investigates the eligibility of any foster or adopting parents, educates them, and only then grants approval for an adoption. Article 18-6 of the Child Welfare Act bans "any activity of a person or an institute, except those who have the legal right to arrange adoption in exchange for compensation."

Article 34-4 provides that penalty for those who violate the above provision shall be "imprisonment for one year or less or 1 million Korean Won (equivalent of US\$ 1,300) or less." These provisions, however, contradict the Amendment of the Special Adoption Act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in December 1994.

This legislation provides a penalty of "imprisonment of two years or less, or a fine of 5 million won (equivalent of US\$ 6,300) or less." It does not make sense that the same violation should have different penalties depending on the given law. There needs to be a single penalty provision that is harsh enough to prevent the illegal arrangement of



adoption.

2. The rights of an adopted child to express his own opinion should be guaranteed. It is unfair that a child under the age of 15 can be adopted with the agreement of his legal representatives regardless of the child's opinion. The age limit is underinclusive and should be lowered. Before the adoption of a child over three years of age is finalized, the child should be given time to adjust to the adoptive family and then a chance to give his opinion on the adoption.

3. The adopted child should have a right to know its original parents. Children have the right to know their adopted status and birth parents if possible, thus the need to preserve birth records. Given Korean society's emphasis on bloodline and family registry, it follows that both birth and adoptive parents usually wish to keep secret any adoption in the family. Thus, more than 99% of adopted children are registered as birth children, which is illegal under current law and precludes the adopted children from exercising the right to know their birth parents. There should be a double birth registry system, under which an adopted child's birth family registration before adoption is kept in the custody of the family courts while he/she is registered in the adoptive family's registry.

4. Dissolution of adoption and lawsuits seeking confirmation of lack of blood relation should be banned.

In Korea, adoptive parents are allowed to file a lawsuit if they think that their adopted child has problems and that they want to dissolve the adoption, thereby relinquishing their responsibility to raise the child. The system does not consider the interests of the child, only the convenience of the adoptive parents. The system should be reformed so that such dissolution is not allowed until the child reaches the age of twenty, until which age the family should be guided by the court to resolve any problems within the family. However, the phenomenon of lawsuits under the Civil Code seeking confirmation of lack of blood relations presents a more urgent situation for children's rights. By simply filing the suit, dissatisfied adoptive parents are able to simply cut off all legal relationship with adopted children.

## Section 8. Abuse and Neglect (Article 19); Physical and Psychological Recovery and Social Reintegration (Article 39)

### Issue 20

Currently there are many cases of both physical and mental child abuse, which needs stronger laws,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supporting organizations to fight it.

### Recommendations 12

1. Laws against child abuse should be strengthened. Under the current version of the Child Welfare Act, legal protection for children against abuse is very minimal. Article 18-9 of this law is the only legal prohibition against "the abuse of a child under one's own protection or supervision." This provision does not go far enough to specify what constitutes abuse. Article 34-3 provides that anyone

who violates Article 18-9" shall be punished with imprisonment for two years or less, or pay 2 million won (equivalent to US\$ 2,500) or less, "neither of which are effective deterrents against child abuse.

Furthermore, there has never been an actual punishment on record for any violation of the above provision. The current version of the Child Welfare Act has no administrative orders, so that it has no enforcement mechanism at all. What is needed is a separate, comprehensive law against child abuse.

What legal ground there is to intervene in an abusive situation is very minimal. Article 18 of the Child Welfare Act states that government officials or committee members working in children's issues may "visit locations suspected of housing violations of Article 18 and question or interrogate the child or persons involved." However, such officials may not actively intervene in the situation; if they took the child into custody and out of the abusive household, they have no legal standing and therefore would be charged with trespass or kidnapping. It must be noted that most physical abuse of children is conducted by family members. More than 70% of child sexual abuse cases are committed by family members, relatives or well-known persons.

Regarding physical punishment at school, Article 76 of the Education Law provides that "the principal of each school can punish or discipline students as needed." There have been six court actions dealing with violence by teachers against students.

Among those six, only one was successful (Article 78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of March 14, 1978). There has even been a case of a gym teacher beating his student to death for missing a civil defense exercise. The teacher was not charged for homicide (Seoul High Court, decision of June 23, 1978)

2. There must be a reporting system for child abuse cases

The government should require systematic reporting of child abuse; in the alternative, Korea needs a confidential system operated on a national level. Korea may consider the other countries' model; The Confidential Doctors' Bureau in place in some European countries, such as the Netherlands; an entire governmental body in the United States which is responsible solely for dealing with child abuse in a comprehensive way, covering child abuse from the initial report to follow-up.

3. There must be proper psychological and physical recovery services for abused children to help the function in society.

Korea has such services only for the most serious of cases and on a temporary basis. The Association to Prevent Child Abuse receives reports of abuse, at which point the child is given temporary shelter at facilities like a Child Counselling Center or Children's House (There is at least one such facility in most cities) or is medically treated by the Association or at a hospital. This system needs to be more comprehensive, with legal support services and treatment for abusers as well as victims. A foster care system to help abused children return to society is also a necessary link in such a comprehensive system.



## Section 9. Periodic Review of Placement (Article 25)

### Issue 21

Most child welfare facilities in Korea are geared toward infants, therefore unequipped to deal with the varying needs of children of different ages.

### Recommendation 13

There are no existing facilities to support adopted children or those with emotional needs. There is an urgent need for facilities to deal properly with various children's needs: runaway shelters, broken family care centers, drug rehabilitation facilities, abused children centers, etc.

### Issue 22

Even those facilities existing for infant care do not properly perform their purported function. The government subsidizes such facilities according to the number of infants in their care; consequently, such facilities attempt to take in as many infants as possible.

In 1993, a given infant care center had an average of 59 infants, while child care centers have on the average 78 children on their rolls. Those numbers are much higher than comparable statistics in Japan in 1988; 23 infants or 50 children per center, on the average.

### Issue 23

The government provides little more than superficial guidance and monitoring of child welfare facilities, where human rights are violated on a large scale. Sexual abuse, assault and battery, forced labor, verbal abuse, forcing parents to give up their children, seizure of financial support, etc., have been going on for the last ten years. The government has never exposed such activities through its own surveillance, and even when they are reported, the government has rarely taken remedial actions.

## CHAPTER 6 BASIC HEALTH AND WELFARE

### Section 2. Disabled Children (Article 23)

#### Issue 24

The first priority for disabled children is to figure out their exact population size in Korea. The government report estimates the number at around 100,000, or 0.76% of the total child population, an unrealistic guess, even if based on conservative research.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Welfare Research took a 1990 survey and reported that the birth rate of disabled children is 3.72%. Even the Education Ministry's annual report to the National Assembly estimates a figure larger than that of the government's report: 223,963 disabled children, or 2.44% of the total child population (1994). As another reference point, it is useful to note that other organizations for the disabled estimate the figure to be 900,000 children, or 10% of the total child population of 9,178,811.

### Recommendation 14

A regular census count of disabled children should underline all relevant government policies.

### Issue 25

As stated in the government report, most disabled children are placed in adult facilities. Those facilities lack even basic professional services and funding so most patients are simply left there without any rehabilitation programs. Funding, meager as it is, comes almost completely from the government, and again is based on a headcount, resulting in overcrowded, poorly-serviced facilities.

### Recommendation 15

Disabled children require separate placement that is tailored to the degree and type of disability as well as the age of the child. The facilities should be operated under professional rehabilitation experts who can provide real treatment for such children.

### Issue 26

Korea lacks special education institutions for disabled children. The 21st Century Committee, an advisory group to the President, estimates that only 12.6% of the total disabled child population receives special education (1994). Due to limited government funding, such institutions are poorly equipped and staffed. Efforts to integrate disabled children into the regular schools is also severely limited.

### Recommendation 16

The government should expand the public special education institutions that meet the population need. At the primary level, they should be specialized according to need, and integrated at more advanced levels.

### Issue 27

Current laws mandate that companies with more than 300 employees hire the disabled at a rate of 2% of total employees. However, the employment rate of the disabled in government organizations is a mere 0.71%. Other industries are worse offenders, hiring an average of only 0.42% disabled workers. According to government statistics, the overall unemployment rate in Korea is at 2.1%, while that of the disabled is 32.6%. Most disabled workers (68.7%) are in manufacturing industries and are paid only US \$ 250 to 500 per month, much lower than the average wage in those industries.

### Section 3. Health and Health Services (Article 24)

The medical insurance system in Korea provides insufficient medical care coverage, leaving heavy personal expenses that are too burdensome for the poor to pay for proper medical care for their children. Furthermore, medical coverage in Korea does not cover ultrasound tests, CT (Computer Tomography) or 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tests. There is no coverage for preventive medicine such as vaccination or physical check-ups. Hospitals needlessly use specialized medical consultation for which patients must pay, and hospitals make patients bear 55% of the cost of out-patient



treatment, and over 50% for in-patient treatment. The aggregate of these facts demonstrate why poor families do not get proper medical care (Hankyureh News, January 15, 1995)

While it is possible to specialize in pediatrics in medical colleges, pediatricians per se are in reality only general practitioners who happen to treat children. In fact, most children in Korea are forced to see doctors who usually treat adults. Given the well-known fact of specific physical needs of children, pediatricians should be trained in all specialties specifically for child patients.

#### Section 4. Social Security and Child-Care Services and Facilities (Articles 18-3 and 26)

##### Issue 28

In Korea, government spending on social security is very minimal. According to a source countries, social security budgets average 10 to 20% of the GDP, compared to only 1.4% for Korea (IMF, 1991). Korea's overall welfare budget is only 63.8% of the IMF Standard, a rate lower than that of Bangladesh (12.3%) and Sri Lanka (18.6%). Most countries have a child allowance system that recognizes the need to protect the future through their children. Korea neither has nor plans to introduce such a system.

##### Issue 29

The government has been able to nurture the day care centers over the last four years since the passage of the Child Care Law in 1991. The national budget spent on child care increased 2.8 times over three years, from US \$ 52 million in 1991 to 148 million in 1994. Meanwhile the government has reported that there were 1.03 million children needing day care in 1994, while only 219,000 received such care in 1994, while only 219,000 received such care at a 8,975 facilities, a mere 22% of children who need it.

The government takes very little responsibility for the burden of working mothers trying to care for their children. The government uses its own discretion in supporting child care programs, the result being an abundance of private day care and little publicly-funded care. Due to a lack of after-school programs, children receive inadequate care-less than 1% of school children receive institutional care.

A major hindrance to effective government-sponsored day care is its current structure around ease of administration, not around the interests of children. Availability of services is concentrated in big cities, so that mid-to-small size cities and rural areas do not have access. The government persists in promulgating parental self-sufficiency in child-care- thus the emphasis on private, not public, care. There is no unified source of governmental financial support, and low quality control for child care. Finally, government-sponsored child-care is not diversified enough to meet the diverse demands of infant care, care of the disabled, and extended care.

##### Recommendation 17

The government needs to actively change its focus away from administrative ease to children's rights, reform the system and sufficiently fund its child-care program.

## CHAPTER 7 EDUCATION, LEISURE AND CULTURAL ACTIVITIES

### Section 1. Education (Article 28)

#### Issue 30

Although the number of students in one class has been decreasing, the average class size is still not adequate; in 1994, the average size was 37.7 students for an elementary school class, 48.9 junior high school students and 47.4 high school students (Handbook of Education Statistics, National Institute for Education Evaluation). Educational deficiencies follow from overcrowded classrooms as well as oversized schools, another common phenomenon, due to lack of resources and space.

#### A. Problems according to school level

##### 1) Elementary School

#### Issue 31

The two-shift system persists in Korea and infringes on certain educational rights. Although on the decrease, there are still 1,027 first-grade classes, 643 second-grade classes and 125 third-grade classes that operate on the two-shift system, an unstable educational environment.

#### Issue 32

In rural areas, merger and abolition of small schools is proceeding according to a government plan to decrease the number of small-size schools nationwide by 10% by the year 1995. The government is thereby sacrificing the right to an equal education in the name of efficiency. In the Gapyung area west of Seoul, residents filed a suit against the closing of the Doomil School and protested for over a year by conducting their own classes with residents serving as teachers.

#### Issue 33

The government pays for school meals at the elementary school level. As of November 1994 only 38.2% of elementary schools were providing school meals. President Kim vowed during his campaign to expand school meals to all elementary schools by 1997, but then backpedaled, revising the law so that parents, especially those in the poor and rural area, shoulder that burden of providing the expanse of facilities.

##### 2)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s

#### Issue 34

Life in secondary schools is quite restricted, akin to the military. The first priority is always advancement to the next level and this priority is used to keep rigid rules that are very strict and undemocratic.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is common: unfair punishment, assaults, insults. Discipline is based mainly on penal measures to isolate so-called troublemakers, not on reasonable counselling. Juvenile delinquency results directly from this system. In Korea a student has no right to a hearing before



punishment, in direct violation of Article 12 of the Convention. And there is little means to prevent student drop-out caused by severe punishment or lack of school performance.

Poor facilities are basic insults to human dignity: small classrooms, undersized desks and chairs, unsanitary toilet facilities, a lack of welfare facilities.

### 3) Pre-school

#### Issue 35

In Korea, 78% of all kindergartens are privately-run, profit-making ventures. As pre-school education is not included in public education system, children in the poor and rural area cannot afford it.

### 4) Vocational Education

#### Issue 36

Vocational schools are conceived mainly as a dumping ground for students who have dropped out of the regular system. They are poorly equipped with outdated facilities, and appear to be merely a means to exploit cheap labor. For example, agricultural school students practice farming, but the school sells the harvest and is allotted its budget for the upcoming school year according to its harvest sales performance--a self-perpetuating system of exploitation.

### 5) Remedial Education (152-154)

#### Issue 37

Remedial schools exist for those students whose educations were held back by economic troubles. Successful to date, these schools give hope to troubled youth, and supplement the regular school system. There is now movement by the government and concerned industries to close them down. Of the current 31 schools nationwide of 336 classes, eight will be closed down in the two years.

### B. Education Budget (155)

#### Issue 38

Korea's educational budget, 3.6% of the GNP, falls short of other countries, both industrialized and not. The natural outcome is a heavy private economic burden--the total private expenditure on education is US\$22.6 trillion, and an individual household spends an average of 30% of its budget on education (Statistics from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1994).

## Section 2. Educational Goals

### Issue 39

The stated goal of Korea's educational system is "devotion to the welfare of mankind," a goal blocked by the cramming system geared toward college entrance exam. The system kills creativity and individuality in youth. Those not deemed eligible for college fall behind and into misconduct, or at worst, commit suicide. The government announced educational reform on May 31, 1995 and must fulfill its promise.

### Recommendations 18

1. The arbitrary entrance exam system, first on the reform list, is the source of most of the country's educational problem.
2. The educational budget needs to be increased to 5% as promised by President Kim's campaign.
3. Working conditions for teachers need improvement. Teachers need to be freed from long teaching schedules and administrative tasks so that they may concentrate their efforts into teaching.
4. Students need to be given more self-determination in decision-making that concerns them.
5. Students deserve a fair hearing both before and after punishment. There needs to be guidance, counseling and special activities for those who are disciplined so that discipline is a learning, not merely a penal, experience.
6. Students need to be informed of their rights in school so that they can exercise such rights independently.

## Section 3. Leisure, Recreation and Culture

(Articles 17 and 31)

### Issue 40

Leisure, recreation and cultural activities for children are severely limited by the entrance exam orientation of the education system. Most children spend their time in private institutes or lessons after school. According to a survey by Hankyureh News in 1995 of 600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the Seoul area, 79.6% go to private institutes or are privately tutored. In response to the question "What would you like to do if your parents allowed it?" 41.7% responded "Just play."

In response to the question "What are you worried about now?" 53.4% answered "exam results." Children cannot simply be children in Korea. High school students suffer unstable emotions and pressure. Among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students, 44% experienced anxiety about exams and accompanying bodily symptoms. (Survey of the Juvenile Counselling Forum, November 1993).

### Recommendation 19

The government should reform education so that children can enjoy leisure, recreation and cultural activities.



#### Issue 41

There are not enough facilities for children to play and take part in leisure activities. It is even worse in urban poor and rural areas. There are privately-operated non-profit organizations sponsoring after-school study rooms in Seoul for the children of low-income families. According to a survey of 940 children, none had ever had any private music or art lessons. Almost none ever go to music concerts, recitals, plays, operas or puppet shows with parents or friends. Children over 14 years would rather go to adult establishments such as karaoke houses, coffee shops, drinking bars, video parlors, and pool halls.

(Report of Environmental Surveillance Team of Y.W.C.A. Against Harmful Environment for Youth, August 27, 1994).

#### Recommendation 20

There is minimal investment in cultural appreciation for children, as the government report states. The government and local autonomous organizations should develop diverse programs for children to enjoy proper leisure, recreation, and cultural activities. They should also invest in space and facilities for such cultural events. Laws should be revised to financially support cultural facilities of privately-operated non-profit facilities such as the above.

#### Issue 42

There are not enough spaces that foster reading in children. In 1990, there were some 100 million books published for children: 48% of them were reference books and comic books. (Status of children in Korea and the prospects for the year 2000, Sunshim Kim, Jungin Hahm, p.15). Only 47% (4,893) of high schools in Korea have their own libraries. School libraries in Korea have three books per student; there are 1,881 students per library (Seoul Daily News, August 1992). In 1992, the government budget for books represents only 0.066% of the total educational budget.

#### Issue 43

There are serious harmful effects from violent and sexualized movies, dramas, pornography, video games and computer software. According to statistics on exposure of juveniles to such material, 53% of the students sampled had experienced such material through computers and 63.6% did by video tapes (Y.W.C.A. public hearing on regulation to restrict material harmful to youth, Junho Kim, October 1994, pp. 14-16).

#### Recommendation 21

Korean government should strengthen the function of an agency to protect children from harmful audio-visual materials. At the same time, there must be media education in schools.

## Chapter 8 SPECIAL PROTECTION MEASURES

### Section 1. Children in Conflict with the Law ( Articles 37, 39, and 40 )

#### Issue 44

Juvenile crimes, as stated in the government report, should be dealt with based on the principle of "education rather than punishment," and "separate justice for juveniles." These important principles have not been implemented properly.

#### Issue 45

Most juvenile criminals are interrogated under confinement. In 1993 alone, there were a total of 119,286 juvenile crime cases, 21,850 of which led to arrest and process in the general criminal courts, while 48,078 were prosecuted. Only 12,365 cases were forwarded to the juvenile department (Grand Prosecution, 1993, 555-556)

#### Issue 46

A juvenile who is arrested and detained for his crime is totally vulnerable to other bad influences while under detainment. In 1993 there were 23,256 juvenile crime cases, from which 4,119 led to a prison sentence, 5,734 to probation, and 11,037 to processing in the juvenile department ( Court Administration, 1994, 479, 956 ). The average length of an initial trial is 2.9 months before a panel of judges and 2.3 months before a single-judge court. After the second trial, which took an average of 2.7 months, 806 cases received probation and 1,543 were forwarded to the juvenile department ( Court Administration, 482 ). For the first trial sentence, typically juvenile stay at a detention center for two to three months, sometimes up to six months. If the suspect is not released by the first court, he/she is detained. In detention, juveniles are subject to influence by other criminals. Separation of juvenile criminals from adult criminals is urgently needed. Article 57 of the Juvenile Law provides for such separate proceeding, but the courts have ignored those provisions.

#### Recommendation 22

The following procedures should be adopted to solve the above problem:

1. Pre-trial determination of juvenile status. The courts, instead of the prosecution, should determine whether a case is sent to the prosecution as a general criminal case or processed instead through juvenile protection proceedings;
2. Juvenile should be confined at a juvenile detention center or already-existing juvenile houses separately from general criminals;
3. All juvenile proceeding should be closed to the public;
4. The court should ensure speedy trials;



5. Juvenile criminal cases should be minimized in favor of juvenile protection cases;
6. Juvenile, more vulnerable than adults, must be granted counsel by an attorney or other assistant during interrogation. Presently, the court will appoint a lawyer only after prosecution begins. Attorney representation should be extended to juvenile protection cases.

## Section 2. Children under Exploitation (Article 32)

### A. Economic exploitation (Article 32)

#### Issue 47

Under the Labor Standards Law, the government prohibits child labor. The law applies only to companies with a minimum of five employees, and fails to protect from exploitation children who work for companies with less than five employees.

#### Recommendation 23

The Labor Standard Law should protect all children from economic exploitation.

### B. Drugs (Article 33)

#### Issue 48

Drug abuse among youth is not yet a serious problem in Korea, but there are a considerable number of cases youths overdosing on medicine or inhaling hallucinogenic chemicals.

#### Recommendation 24

Drug abuse is so easy for youth because medicine does not require a prescription to purchase at the drug store, a situation that must be changed through a prescription system.

There need to be more public facilities for treatment of drug abusing youth at little or no cost.

### C. Sexual Abuse ( Articles 19, 34, and 39 )

#### Issue 49

According to a 1990 study on sexual assault conducted by the Research Institute for Criminal Policy, 6.5 % (or 146 of 2,262) of the women surveyed who had been sexually assaulted had been sexually abused as a child. Sexual abuse of children accounts for about 29.4 % of sexual abuse cases reported to the Counseling Center for Sexual Assaults.

Victims range in age from infancy to adults still suffering from the mental effects of childhood assaults. 75.2 % of such victims know their assailants. Among those assailants, 60.6 % are neighbors, teachers, or friends' fathers, while 39.4 % are family members or relatives such as fathers, stepfathers, brothers, cousins, uncles or grandfathers.

25.6 % of all child sexual abuse cases are committed by underage assailants. The government report does not mention the sexual assaults against children at all. It does not mention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Law on Sexual Assaults, either.

#### Issue 50

The law provides that if the victim of a sexual assault is a child, he/she cannot file a suit without a legal representative. If the assailant is the child's legal representative (ie., father or head of institution if an abused child is under his custody), then the victim's family, relatives or a third party testifying to the case can file a suit. If the assailant is the father, the mother would be the legal representative, but if she does not want to see the destruction of her family or she is unable to financially support her family herself, it is almost impossible for her to file suit. The provision makes difficult, if not impossible, pursuit of proper legal action against sexual assault.

Even doctors, who are supposed to diagnose and treat sexually-abused children, try to avoid issuing their notes as evidence to avoid getting involved in a long and complicated legal process.

#### Recommendation 25

People of many professions have frequent opportunity to face abused children:

pediatricians, teachers, clergypersons, counselors, policemen, social workers, psychiatrists, and so on. There should be legal grounds for them to report either suspected or definite cases of abuse to the police, and to provide support during the course of interrogation or court trial. There needs to be more private and public organizations established to study sexual assault and abuse cases and to work on prevention and handling of such cases.

Korean education should include sex education for children so that they can recognize abuse, as well as social education programs for parents and teachers.

#### Issue 51

While the government report mentions the provision for the assailant, it does not explain the care for the abused children.

#### Recommendation 26

Government-sponsored rehabilitation and counseling programs are needed to help the child victims, their parents and other people suffering from the mental effects of abused childhoods, etc.

#### Issue 52

Article 159 of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provides that a person under age sixteen is incompetent to take a legal oath. The article also provides that if a child is strong enough, both physically and mentally, to endure the proceedings, he/she may take the witness stand, but the court has final say as to whether such testimony will be accepted or not.

In many cases, the basis for a rejection of child testimony is unclear as to whether it was not conclusive or contradicted. (34)



### Recommendation 27

Children are the key witnesses in sexual abuse cases. Under proper court supervision, a child deserves the chance to explain the facts of his/her case and to secure his/her right against self-incrimination. The method of capturing testimony can also be tailored to the situation such as voice recording, written letter, or videotape. In the case of cross examination of an abuser, the court can hear both sides separately in a closed courtroom to protect the victim from further reminders of his/her frightening experience.

### Issue 53

It is illegal for minors to work in adult entertainment or prostitution, but the laws against such trades must be more strictly enforced. (202, 203, 204, 205)

### Recommendation 28

The Labor Standard Law should protect all children from economic exploitation. People of many professions have frequent opportunity to look at school children. Teachers, doctors, dentists, lawyers, and so on, should be legal grounds for them to report child abuse or neglect. They should be trained to provide support during the course of their professional duties. There should be more training and public education for these professions to help them identify and report child abuse.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training and support for these professions to help them identify and report child abuse.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training and support for these professions to help them identify and report child abuse.

Drug abuse is so easy for youth because of the ready availability of drugs.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training and support for these professions to help them identify and report child abuse.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training and support for these professions to help them identify and report child abuse.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training and support for these professions to help them identify and report child abuse.

Government should provide training and support for these professions to help them identify and report child abuse.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training and support for these professions to help them identify and report child abuse.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training and support for these professions to help them identify and report child abuse.

According to a 1990 study by the Research Institute for Criminal Policy, 6.5% of the women surveyed who had been sexually abused had been sexually abused by a person they knew.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training and support for these professions to help them identify and report child abuse.

Both physically and mentally, to ensure the proceedings help the child,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training and support for these professions to help them identify and report child abuse.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training and support for these professions to help them identify and report child abuse.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training and support for these professions to help them identify and report child abuse.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training and support for these professions to help them identify and report child abuse.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training and support for these professions to help them identify and report child abuse.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training and support for these professions to help them identify and report child abuse.

##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 공동육아연구회
- 또하나의 문화 교육소모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부스러기선교회
- 서울지역공부방연합회
- ACRP서울평화교육센터
- 성폭력상담소
- OMEP세계유아교육기구 한국위원회
- 어린이도서연구회
- 여성단체연합
- 열린글 나눔살터
- 우리 아이들의 보육을 걱정하는 모임
- 인권운동사랑방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국자원활동단체협의회
-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 한국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회

### <함께 하신 분들>

- 공동대표: 이오덕(교육학자/우리말연구소소장), 이운구(서울평화교육센터 원장/한국선  
명회회장), 주정일(아동학자), 한승헌(변호사)
- 실무대표: 이기범(교수, 숙대 교육학과/공동육아연구회)
- 실무간사: 류은숙(인권운동사랑방)
- 집필 및 감수: 노혜련(교수, 숭실대 사회사업학과), 이용교(한국청소년개발원)  
안창도(교육민회), 장호순(크리스찬아카데미사회교육원)
- 보고서영역: 박태훈, 캐틀라이나 한